

여야, 장관 인사청문 이틀째 ‘자질·역량’ 놓고 공방

증인 채택·자료 제출 문제 충돌
안규백 군 복무 경력 두고 설전
野, 권오을 ‘겹치기 월급’ 주장
與 “법적 제출 힘든 자료” 방어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이틀째인 15일에도 자질과 역량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무자격 5적’ 중 한 명으로 꼽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의원은 “2003~2004년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며 “홍길동의 분신술이 아니고서는 전국 너댓곳 업체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성영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며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잘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영향을 줬다 온 것 아니냐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

적기록부 제출을 안 후보자에게 거듭 요구하자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3선 현역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공약 입안을 주도한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적임이라며 힘을 실었다.

박정 의원은 “전임 정권 장관들은 전문성은 있지만 소신이 부족했고,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약간 후퇴가 있었는데 앞으로 환경부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중됐으며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의원은 “탈원전 기조를 가진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에너지 정책에 과도하게 매몰돼 환경부 본연의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선 전관예우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냈던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의 영입이 전관예우로 급성장한 것으로 의심되나, 임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방어막을 쳤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與, 강선우 낙마 공세 차단 기초… 여론추이 ‘촉각’

이진숙 청문회 후 최종판단 관측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선우(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대통령실과 함께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살피며 임명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 과정에서 비교적 충분히 소명됐으며 낙마 공세 차단 기초를 이어갔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여가부 장관을 맡을 정책적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 전 걱정에 비하면 후보자가 나름 소상하게 설명하고, 국민과 마음에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사과·소명했다”며 “청문회가 예상보다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 후보자가 청문회 고비를 잘 넘겼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소상히 해명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겸허히 인정하며 사과했다”며 “무엇보다 여가부가 나아가 방향과 정책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가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면서도 여론 추이를 동시에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16일)까지 거친 뒤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대통령, 20개국 정상에 경주 APEC 초청 서한

트럼프·시진핑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광주시당위원장 안태욱 후보 단독 추대

국민의힘 차기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 안태욱(사진) 국민의힘 광주광산을당협위원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추대 형식으로 시당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한 차기 광주시당위원장 후보 공고에 안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당초 김정현 현 광주시당위원장은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경선 대신 추대 형식으로 안 후보가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중앙당 문화관광 심의·전



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이사관), 광주시당 사무처장, 광주교통방송 사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중앙당 국민통합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광산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남도당에서도 차기도당위원장 선거에 김화진 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해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와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우 의장 “李 대통령 개헌 의지 높아… 시기 잘 판단해야”

“국회 수렴 상황 보며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공약을 했고, 거기에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다만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며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면서 (개헌을)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우 의장은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다시 제안했다.

우 의장은 당시 제안과 관련해 “정권이 시작하면 (개헌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와 충분히 얘기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여론이 워낙 높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도 5월18일 5·18 묘역에서 개헌 공약을 얘기하면서 ‘우 의장하고는

의했었는데 내란 종식 여론이 높아서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 의장이 오히려 받고’ (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의 민낯을 제대로 국민이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본다”며 “여야 간 논의가 될 텐데 가급적 합의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잘 수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혁신호남포럼 “RE100 특별법, 호남발전 기회”

전력계통 설치·기업 인센티브 필요

대혁신호남포럼이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힌데 대해 “호남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전환기”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혁신호남포럼은 이날 환영문을 내고 “RE100 산단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으, 서남권인 호남이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대기업 본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가 많은 대규모 산업단지마저 수도권에 조성하는 등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번 발표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돼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전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 곳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 설치 및 대규모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관련 기업의 이전 또는 투자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주를 위한 질 높은 주거·편의·문화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